새만금 확대 개발 … J프로젝트 등 전남 현안사업 초비상

신항 들어서면 광양항 물동량 38% 빼앗겨

국제공항 건설땐 호남권 항공 승객 분산 불보듯

골프장 8개 추진 … J프로젝트 핵심사업 치명타

'나는 새만금, 기는 J프로젝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보다 면적이 4배나 넓고, 사업 계획 발표도 5년이 뒤늦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남 최대 전략사업인 J프로젝트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계획의 개발 방향이 J프로젝트 개발 계획과 겹치는데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J프로젝트 면적 축소를 요구하는 등 전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4만여 ha에 달하는 새만금 개발 대상지 중 38%는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 30%는 농업, 나머지 28%는 구체적인 수요 확인 후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구상안에는 기존 군산항과 별개의 신항만 및 국제공항 건설이 포함돼 있다.

신항만은 그동안 전북도가 주장해온 대로 고군산군도 일대에 16선석 규모로 건설된다. 새만금에 항만이 들어설 경우 광양항은 지리적 위치상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권의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이 지난해 처리한 수출·입 화물 140만5천TEU 중 수도권 물동량은 19만6천TEU(14%), 충청권 9만2천TEU(6.6%), 전북권 24만6천TEU(17.5%)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항의 총 물동량 중 수도권 등 3개 지역의 물동량 비율이 38%나 돼, 광양항은 상대적으로 비싼 물류비로 인해 기존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새만금항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존 군산공항을 확대해 조성하는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무안국제공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9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자 범위는 광주·전남과 전북 일원이지만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전북지역과 전북 인근 전남지역 승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새만금에는 오는 2020년과 2030년까지 각각 3개, 5개의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여서 J프로젝트 계획 중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오는 10월 최종안을 제출받아 올해 안에 새만금토지이용기본구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J프로젝트는 승인신청을 심의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오는 25일로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4일 회의를 열고 J프로젝트 대상지역 중 구성·삼호·초송지구 51.57㎢의 개발계획 승인 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J프로젝트 대상지역 중 해남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서는 등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중도위 개최가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초 중도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끝내려던 전남도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J프로젝트 개발면적이 정부의 시범구역인 삼호·구성지구 등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TV 프로 주인공과 즐겁게 … 아시아권 최대의 문화콘텐츠 마켓인 '제3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이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TV 어린이프로그램 주인공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행사는 7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2012년〉

李 대통령이 나서야

대선공약 불구 부처 예산 타령만

정부 일각 '2015년 완공설' 솔솔

경부철 2010년 마무리… 지역격차 심화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들이 예산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 입장=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완공과 관련, 공법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 조기완공을 위한 기본 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을 2017년 완공을 전제로 짜여진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2천6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실무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긴다 해도 1~2년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2012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더욱 회의적이다. 예산을 감안하면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호남고속철도가 2015년께나 완공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으며, 실무 관계자도"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호남고속철의 2012년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 문제=호남고속철의 2012년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국고+철도시설공단 조달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현재 재정 운영 계획에 잡힌 2013년~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예산 5조8천750억원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 운영 계획상 2010년에는 6천531억원, 2011년 1조5천335억원, 2012년 2조573억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2012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적게는 3조5천억원, 많게는 5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경춘선(2010년 개통), 전라선(2011년 완공), 경부고속철도 2단계(2010년 완공) 등 타 철도 분야 사업의 지연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청와대 결단 필요=정치권과 관계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잘해야 기본계획에서 2년정도 앞당겨진 2015년 완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경부고속철도가 오는 2010년 사실상 완공된다는 점에서 지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통합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 임기내 완공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침체에 빠져있는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지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산 문제는 세계 잉여금을 이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나서면 방법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호남에 내세웠던 대선공약을 외면한다면 호남민을 우롱하는 처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역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북구의회 수사 확대 … 광주 정가는

"의원들 줄줄이 소환" 소문과 우려 팽배

일부 의원 "얼굴들기 부끄럽다" 자성론도

'어디까지 번질까?'

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의 '뒷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운초(63·북구 라) 의장의 구속에 이어 민주당 지역구 K 국회의원의 수사로 이어지는 등 전방위로 확대되자 4일 의회 내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경남 산청군에서 열리는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등 적막감 속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다.

의회내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은 경남지역 연수현장에서 최 의장의 구속 소식과 수사 확대방향을 수소문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모 의원, 모 의원 등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아무 문제가 없는데 갔겠느냐', '끝이 아니다. 또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과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전화받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이었고 아예 휴대전화를 받지 않기도 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연찬회 일정도 빡빡하지만 사건과 관련, 의원들간 오가는 말이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의원은 "참담하다", "솔직히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문인지 '한번 더 터지면 모두 죽는다'는 심정으로, '등잔 밑'을 점검하고 윤리위를 구성, 윤리 의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 연루 의혹, 사전 밀약설 등이 나돌 수 있느냐"면서 "책임 정치를 추구해야 하는 만큼 당이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광옥 정치 복귀 시사

"당 단합에 역할 할 것"

최근 사면·복권된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정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전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지도부와 대화를 통해 당이 단합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치복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사면 ·복권 뒤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영령들에게 참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광주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